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공공부문의 모범적 역할 적극 추진

-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상생의 노사관계 선도 -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 기조하에서,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를 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법령이나 예산에서 정해진 바 없이, 포괄적인 운영상 재량이 있고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따라서, 일부 부처(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자문 의뢰하는 것은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정한 합리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노동계와의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협의·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개정 노조법 취지를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해 현장의 신뢰를 쌓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계도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참여·소통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노사협력정책관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책임자	과 장	최재윤	(044-202-7372)
		담당자	사무관	서관범	(044-202-7693)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책임자	과 장	황남경	(044-201-7421)
		담당자	사무관	배영균	(044-201-7425)
담당 부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책임자	센터장	이성호	(064-780-6001)
		담당자	사무관	김용재	(064-780-6002)

